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자료집

2018.11.

본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이 남북한의 통합을 전제로 구성한 여섯 개의 시나리오 중 우리 국민이 어떤 한반도의 미래를 선호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시는 글

2018년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 역사에 남을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필두로, 4·27 1차 남북정상회담, 5·26 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9.18.~9.20)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처럼 남한과 북한 사이에 따사로운 봄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남북한 국민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은 분홍빛 미래는 짧은 만족과 긴 혼란을 선사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남북한이 통합되는 경우를 전제로 구성된 여섯 개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합 형태에 대한 여섯 가지 시나리오 중 2030년과 2050년을 기준으로 국민참여단이 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가능미래), ② 선호하는 미래(선호미래), ③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회피미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선택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의 선택을 바탕으로 회피미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선호미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국민과 국회에 제시할 것입니다.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나의 생업과 관계가 없다고 눈 감아 버린다면,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나라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국회미래연구원이 비추겠습니다.

2018. 11.

국회미래연구원장 박진

오시는 길

- 일 시: 2018년 12월 2일 일요일 13:00~18:40
- 장 소: 서울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
 - 서울 월드컵경기장 내 위치: 주경기장 1층(서측으로 입장)
 -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2번출구
 - 자차이용시: 내비게이션에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쪽경기장” 입력(본인 부담 주차요금 일 3,000원)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자료집

CHAPTER

—
01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개요

1장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개요

1. 공론화의 개념

공론(公論)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이다. 즉, 공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논을 거쳐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는 일정한 의견을 의미한다. 공론화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여러 입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뜻한다.

2. 공론화의 배경 및 의의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는 남북한이 통합되는 경우를 전제로 구성된 6개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국민이 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가능미래), ② 선호하는 미래(선호미래), ③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회피미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선택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는 2030년과 2050년을 기준으로 일반국민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각각 가능미래, 선호미래, 회피미래로 선택하는지를 토대로, 그 선택의 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회피미래를 피하여 선호미래가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공론화 방법과 절차

공론화에는 공청회,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된다. 이번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공론화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수행된다. 공론조사는 단답형 설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논의과정을 거치도록하여 정제된 국민여론을 도출한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을 숙의(熟議)라고 하는데, 숙의는 공론조사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공론조사는 일반적으로 1차 설문조사, 참여단 구성, 중간(2차) 설문조사, 숙의과정(학습과 토론), 최종(3차)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미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6개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설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단을 확정하여 자료집을 송부한다. 이후, 공론조사 당일에 참여단을 대상으로 중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송부된 자료집을 통해 미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6개의 시나리오 내용을 이해한 뒤 참여단의 달라진 견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숙의과정을 거친다. 미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6개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고, 참여단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숙의과정을 거친 뒤에 참여단의 견해가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한다.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자료집

CHAPTER

—
02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 구성



2장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 구성

1. 통합의 개념

통합은 하나의 민족이 두 체제 혹은 두 국가로 분리되었다가 재결합하는 것이다. 두 체제 혹은 두 국가의 통합 수준은 ① 군사·외교 통합, ② 거주·이전의 자유화, ③ 화폐 통합, ④ 행정부 통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의 구성

남한과 북한의 통합 형태 및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에서는 ① 군사·외교의 통합, ② 거주 및 이동의 자유, ③ 화폐 통합, ④ 행정부 통합을 기준으로,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6개로 유형화된다.

〈 남한과 북한의 관계 유형 〉

관계유형		예시	정치통합	사회통합	경제통합	행정부 통합
			군사·외교 통합	거주·이동 자유	화폐 통합	
남·북 별개국가	① 경쟁국가	중국-대만	×	×	×	×
	② 우호국가	미국-캐나다	×	△	×	×
	③ 경제통합국가	독일-오스트리아	×	○	○	×
남·북 통일국가	④ 군사·외교통합국가	중국-홍콩	○	×	×	×
	⑤ 느슨한 연방국가 (대등통일)	남북한 연방	○	△(○)	△(○)	△
	⑥ 연방국가(흡수통일)	통일 독일	○	○	○	○

×: 미달성, △: 일부만 달성, ○: 달성

위의 표에서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 유형은 남한과 북한이 개별국가의 관계를 유지하는 ‘남-북 별개국가’와 단일한 국가로 통합되는 ‘남-북 통일국가’로 구분된다. ‘남-북 별개국가’가 유지될 경우에는 ① 경쟁국가, ② 우호국가, ③ 경제통합국가 형태의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남-북 통일국가’의 경우는 ④ 군사·외교통합국가, ⑤ 느슨한 연방국가(대등통일), ⑥ 연방국가(흡수통일)의 형태로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 구성의 기준인 군사·외교 통합, 거주 및 이동의 자유, 화폐 통합, 행정부 통합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외교 통합

군사와 외교에 관한 권한은 국가의 주권(sovereignty)을 상징적·실체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국가가 군사와 외교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즉, 모든 주권국가는 군사권 및 외교권의 독자적 행사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주권국가임을 증명한다.

몇몇 국가가 공동의 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였어도 해당 공동체의 가입국이 개별적인 군사권과 외교권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대외적으로 고유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다. EU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EU 자체의 군사력을 보유·활용하지 못하며 단일한 외교를 실행하지 못한다. 즉, 군사 및 외교에 관한 권한은 EU 개별 회원국의 소관인 것이다.

군사 및 외교에 관한 권한이 국가 간의 관계와 통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 이유는 국익(national interest) 추구의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국제무정부성(international anarchy)을 전제로 한다. 즉, UN은 회원국 간의 갈등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거나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주권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군사력도 활용하게 된다.

두 개의 개별국가가 통일을 이뤘다는 것은 단일한 군사와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한 군사와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소관하는 중앙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군대의 통수권자가 되고, 외교 분야에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한민족이 고유 영토에서 단일한 주권을 지니며,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혹은 총리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군사 및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국가의 군사와 외교에 관한 권한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 간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화폐가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홍콩의 관계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할양(cession)된 홍콩을 중국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구로 편입하고, 군사와 외교 권한을 통합했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의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 1국가 2체제의 통일을 달성하였다.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CCP)이 중국과 홍콩을 아우르는 군사·외교권을 독점(1국가)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2체제(중국의 국가주도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2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과 홍콩 간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며, 각각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2) 거주·이동의 자유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는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다른 주권국가로 이동(여행)하고, 다른 주권국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과 북한의 구성원이 이동 및 거주 자유

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두 국가가 특정 조약을 체결하거나 통일을 달성하여 단일국가를 형성하였을 경우에 가능하다.

독자적인 주권국가 간 이동 및 거주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EU와 같이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경우이다. 또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같이 개별 주권국가인 A와 B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이동 및 거주 자유가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경우이다.

국가 간 경제 통합을 토대로 거주·이동 자유가 보장되는 경우는 경제 통합에 참여한 국가 구성원 간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를 통하여 경제 통합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관계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동맹국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는 전쟁을 치를만큼 대립하였고,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오스트리아를 강제적으로 합병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립국을 선언하면서, 다시 독자적인 주권국가가 되었다.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EU 통합과정에 참여하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EU회원국을 중심으로 체결·확대된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 검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개방조약인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 가입(독일 1995년, 오스트리아 1997년)함으로써, 두 국가의 국민들은 완전한 이동과 거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즉,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마치 하나의 연방국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두 국가 간 이동에 관하여 어떠한 법·제도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거주·이동 자유가 정치, 군사·외교 분야의 통합 없이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반목과 대립, 군사동맹과 강제합병, 전쟁이라는 역사적 갈등을 갖고 있으며, 독자적인 주권국가

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군사·외교의 통합 없이도 일정 수준의 경제적 통합을 토대로 이동 및 거주 자유를 실현하였다.

3) 화폐 통합

주권국가 간 통합의 유형에는 군사·외교 통합으로 대표되는 정치통합, 자유로운 이동·거주 등 사회통합, 화폐 및 재정 통합을 포괄하는 경제통합이 있다. 경제통합은 경제체제의 이질성 완화, 상품 및 노동 시장에서의 장벽 제거, 화폐통합, 재정통합 등으로 나뉜다.

특히, 화폐통합은 경제통합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화폐는 거래의 지불수단이고, 가치의 저장수단이자 척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다수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화폐 발행량을 조정·통제한다. 그런데 둘 이상의 국가가 경제적인 이유로 각국의 화폐를 단일화폐로 통합하여, 그 화폐의 발행과 유통량을 조정·통제하고, 통합지역 내의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하며,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기도 한다. 화폐통합에 따른 자본시장의 변화는 국가 간 요소가격(factor-price: 생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 비율의 변동을 유발하고, 요소이동 경향에 변화를 초래한다.

화폐통합의 방식에는 크게 ‘독일방식’과 ‘EU방식’이 있다.

‘독일방식’은 통일 과정에서 한 국가가 독자적인 화폐 사용을 포기하고, 통일을 이루는 상대국가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은 조약을 체결하여, 동독의 화폐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서독의 화폐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화폐를 통합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화폐통합은 정치적 또는 제도적 통합이라고도 불린다. 시장 기능을 대신하여 정책적·행정적 차원에서 화폐의 교환비율을 결정하고, 화폐통합의 시기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독의 마르크화(DM)는 통일 독일의 화폐로 동독 지역에

도입됐고, 동독의 마르크화(M)는 서독 화폐로 1:1 교환되었다. 남한과 북한이 독일방식으로 화폐를 통합하게 된다면, 북한의 ‘원’을 일정 비율로 남한의 ‘원’으로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EU방식’은 EU 회원국 간 화폐통합을 위해 ‘유로(euro)’라는 제3의 화폐를 만들고, 개별 회원국의 화폐를 일정 비율로 유로와 교환한 것이다. 단일통화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경제규모가 유사해야 하며, 역내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사후적인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화폐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안정적으로 EU방식의 화폐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가 적절한 규모로 성장할 때까지 화폐통합 시점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더라도 화폐통합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서는 기존의 ‘원’을 포기하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남한 지역에서는 남한의 ‘원’을 쓰다가 적절한 시점에 제3의 화폐로 통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화폐통합에 의한 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통해 화폐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두 국가의 통합·통일 과정에서는 정치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개입에 기반하여 화폐통합이 추진된 가능성이 높다. 즉, 독일의 경우처럼 화폐통합의 시기와 화폐 교환율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환율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현금, 예금, 기업 및 개인의 부채, 외국인 소유의 화폐 및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 화폐가치의 독립성 보장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성 유지 등의 기본원칙을 정립하여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4) 행정부 통합

국가는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경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지칭되는 행정부(the executive)를 통해서 수행된다.

행정부가 통합된다는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국가의 결정이 중앙정부에 일원화되어 설계·집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될 수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위계적(hierarchical)으로 형성된다.

행정부 통합은 국가의 대내외적 주권행위가 정당성 있는 중앙권력에 의해 일괄적으로 수립·집행된다는 것을 말한다. 군사와 외교는 물론 무역, 투자 정책 등 대외경제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관리·감독된다. 국내적으로는 정치(특히, 행정), 국내경제(재정 및 금융 정책), 교육, 문화 및 각종 사회정책이 통합된 중앙의 행정부에 의해 설계·집행되며, 사후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자료집

CHAPTER

—
03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



3장

한반도의 미래 시나리오

1. 경쟁국가(중국-대만)

유미래씨의 하루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친구와 북한 금강산 관광 및 스키여행을 갈 계획이다. 북한 지역을 여행하려면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단기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남한과 북한이 현재 외교적 대립 상황이라 비자발급이 까다로울 것 같아 불안하다.

우선, 온라인으로 북한전문여행사를 검색하여, 항공권-호텔숙박-렌터카 연계상품을 예약하기로 했다. 항공권 예약과 면세점 이용 등을 위해서는 여권과 해외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렌터카 예약을 하려고 하니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해야겠다.

금강산 일대와 스키장 근처 유명관광지와 액티비티, 맛집, 사진이 예쁘게 찍힐 카페 등 북한여행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아본 뒤, 유미래씨가 원하는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는 북한전문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선택할 생각이다.

여행하면서 남한 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진 북한의 쇼핑테마파크도 들를 계획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북한도 그랜드 세일을 하는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의 상품 중 일부는 서울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의 전통시장에도 들를 계획이다. 남한과 다른 독특한 볼거리와 먹을 거리가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전통시장에서 특산품도 사고, 길거리 음식들도 먹어보려면 환전을 두둑하게 해야 한다. 출발 당일에 허둥대지 말고, 내일 은행에서 미리 환전을 해야겠다.

- 경쟁국가 시나리오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실패하고, 군사·외교적 대립관계를 유지하되 제도화된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것을 가정한다.
- 경쟁국가 시나리오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실패하고 서로 간의 경쟁을 이어가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과 대만의 경쟁관계를 들 수 있다.
 - 이 시나리오를 남한과 북한에 적용하면, 현재의 중국-대만 관계와 같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적 군사·외교 관계는 유지하면서 제도화된 경제협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시나리오가 현재의 남북 관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군사·외교적 대립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 현재의 남북 관계는 국제정치학에서는 라이벌리(international rivalry)라 불린다. 핵심 특징은 정치 및 군사·외교의 대치, 정상국가관계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교류, 주기적인 군사 충돌이다. 남한과 북한이 그동안 쌓인 적대감에 의해 완전한 경제협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군사·외교적 감시를 상시화 하며 무력사용도 불사하는 것이다.
 - 하지만, 남북이 경쟁관계로 변화하면 군사적 충돌을 멈추고 외교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한국전의 책임 문제, ② 천안함, 연평도 등 군사 도발의 책임소재 및 사과와 배상문제, ③ 현 북한 핵문제 해결 이슈 등이 무력 사용과 같은 군사적 대응 없이 외교대립으로 전환된다. 즉, 지금의 중국-대만 관계와 거의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 이러한 경쟁관계에서도 남한과 북한은 경제교류를 확대·제도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군사적 충돌이 상호 존중, 군비 경쟁 억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상호무역 및 투자 등으로 공동의 이득(joint gain)에 대한 기대이익이 남북한 양국에 발생한다.
 - 남한은 대기업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북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양자

무역과 투자 등 경제교류가 발생하며, 경제교류의 정도와 범위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 경제교류가 확대되면 남한과 북한이 과거의 군사적 충돌의 궤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진다. 양국의 경제교류 활성화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는 군사 충돌이 경제적 의존성에 타격을 주어 양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 다만, 주의할 점은 남북한의 경쟁관계가 경제통합(화폐 통합, 행정부 통합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특별한 수준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화폐 및 특정 수준의 행정통합을 가정하는 거주·이동의 자유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 남한과 북한이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방문할 때 까다로운 여권심사 및 비자발급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대국으로의 거주형 또는 투자형 이민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2. 우호국가(미국-캐나다)

유미래씨의 하루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친구와 3박 4일 동안 북한으로 스키·온천여행을 갈 계획이다.

남한과 북한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여행,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북한으로 여행을 갈 때 비자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항공권 예약, 면세점 이용 및 입국심사 시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행을 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호텔숙박-렌터카 등을 알아봤다. 예약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남북한이 외교정상화를 통해 우호관계를 형성하면서 남북한 국민의 자유 이동 및 여행에 탄력이 붙어 벌써 항공권과 숙박 예약이 만만치 않다.

스키장 근처에 남한 기업이 투자한 자연친화적 스파 리조트를 예약하는데 성공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리조트 내 클럽에서 남한의 유명 DJ가 디제잉 공연을 하는 파티가 있을 예정이라 조금만 늦었어도 예약을 못할 뻔했다. 북한에서 렌터카로 이동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니,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해야겠다.

여행 중, 북한의 전통시장도 들를 계획이다. 남한과 다른 독특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전통시장에서 특산품도 사고, 길거리 음식들도 먹어보려면 내일 은행에서 미리 환전을 해야겠다.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화폐가 통합되면 환전을 할 필요가 없을텐데... 아쉽다.

□ 우호국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실패하지만,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우호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 우호국가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나라 국민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우호국가는 미국-캐나다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각종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두 나라의 국민들은 국가 간 왕복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passport)은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에 단기체류, 여행, 비(非)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를 여행할 경우에도 비자가 불필요하다. 여권과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만 제출하면 캐나다로의 여행이 가능하다.
- 하지만 두 국가 간 비자면제 협정이 양국 국민 간 거주·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구현하지는 못한다. 영구거주 혹은 이민의 경우 양국 이민법(immigration law)의 제약을 받는다. 이동에 있어서도 여권과 e-TA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므로 완전한 자유가 부여되지 않는다.

□ 우호국가 관계 시나리오를 남한과 북한에 적용하면,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대결 관계를 포기하고, 수교(diplomatic relationship)를 통해 서로를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 (행정부 및 군사·외교 통합) 우호국가 시나리오는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두 국가로 존재하되, 군사·외교분야에서는 갈등보다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이전의 반목과 대립이 사라지고 협상을 통해 군비축소(군축), 군사적 화해 조치가 제도화된다.
- 하지만 양국은 여전히 군사·외교적 주권을 각자 보유하고, 이 권한의 통합을 시도하지 않는다.

- (화폐 통합) 남한과 북한은 수교를 통해 우호국가 관계로 발전하더라도 경제통합을 하지는 않는다.
 - 이 경우 두 국가는 군사·외교적 통합과 화폐 통합 없이도 각자의 자율권에 기반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즉, 정치·군사, 경제적 주권은 두 국가에 여전히 귀속되는 것이다.
 - 경제적 통합은 전적으로 양국의 주권 사항으로 정의하고, 절대적 혹은 공동이익(absolute or joint gain)을 추구할 경우 양자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정도로 경제협력을 이어간다.

- (거주·이동의 자유) 여행자에 대하여 비자는 면제될 것이나, 거주는 제한된다.
 - 거주 이동의 자유도 미국-캐나다의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 남한과 북한이 80여년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정상화를 통해 우호국으로 관계를 개선하면서, 남북한 국민들의 자유이동 및 여행이 진행될 것이다. 양국 간의 여행자 비자면제가 실시될 것이다.
 - 다만, 정치·외교·군사의 통합이 없고 경제적 공동체의 형성도 없기 때문에 거주적 자유는 후일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남한과 북한이 우호국가로 발전하면, 군사적 대립 및 갈등 가능성은 낮아지고 경제적 교류가 제도화될 것이며, 거주·이동의 자유는 부분적으로 보장된다.

3. 경제통합국가(독일-오스트리아)

유미래씨의 하루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서울 본사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북한의 평양 지사로 전근 간 친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남북한이 거주 및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조약을 맺어 남북한을 오갈 때 비자면제와 더불어 여권도 챙길 필요가 없어졌다. 남한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등, 여권 등)만 챙기면 된다.

우선, 서울-평양 왕복 고속열차 좌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예매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로 왕복 교통비를 결제했다. 북한 여행 중에도 소득공제 등을 고려해 현금과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남북한이 화폐통합을 하면서 북한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환전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져 편리하다.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등을 통해 평양 인근에 가볼만 한 곳과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 아기자기한 카페 등 핫플레이스를 검색했다. 대동강변에 위치해 리버뷰가 환상적인 레스토랑의 참가 자리 예약에 성공했다. 이 레스토랑은 남한의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곳으로, 음식 맛도 기대된다.

평양에 전근 간 친구의 SNS를 방문했더니 평양 생활이 즐거워 보인다. 남북한의 상품과 노동시장의 장벽해소, 화폐통합 등 부분적 경제통합으로 불편함이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서울보다 덜 복잡하면서 자연환경도 좋고, 비교적 주거와 생활 비용 등도 합리적인 것 같다. 내년에 평양지사로 전근 신청을 고민해봐야겠다. 시간이 좀 남는다면 친구와 평양 부동산에 들러 혼자 지낼만한 집 월세가 얼마 정도인지 알아봐도 좋을 것 같다.

- 경제통합국가 시나리오는 남한과 북한이 개별국가로 존재하면서 화폐통합을 포함한 부분적 경제통합과 거주 및 이동의 완전한 자유보장을 가정한다.
- 경제적 통합과 거주·이동의 제한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있다.
 - 독일 민족 간의 첫 번째 통일시도는 1871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는 제외되었다. 히틀러의 제3제국(The Third Reich)은 1938년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병합시켰고, 2차대전 종결과 히틀러의 몰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다시 별개 국가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과거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우호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두 국가 모두 EU(유럽연합)에 참여한 것이다. 유럽 통합의 삼두마차인 독일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거쳐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는 데 줄곧 회원국으로 참여해왔고, 오스트리아가 1995년 EU 회원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유럽통합에 합류했다. EU 참여를 통한 두 나라의 교류 활성화는 2001년 양국 간 유로화로의 화폐통합을 가능케 했다.
 - 하지만 재정분야에서 두 국가는 완전한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양국 간의 재정통합에 관한 조약 혹은 협약은 부재하며, EU 전체의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수준에서 재정관련 보조를 맞추고 있다. EU 공동 재정 기여를 제외하면 두 국가는 각자 재정자립을 추구하고 있어 재정통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아울러, 두 국가는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의 당사국으로 참여하면서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실현시켰다.
 - 중요한 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군사·외교에서 아무런 통합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국은 독자적인 군사·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국가의 군사·외교 통합의 주춧돌로 작용할 NATO와의 관계에 독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오스트리아는 헌법상 중립규정에 따라 파트너 역할만 하고 있다.

- 경제통합국가 모형을 남북한 관계에 대입하면, 기능주의에 근거한 대북 통일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남북한이 개별국가 상태에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도, 군사·외교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 기능주의(functionalism)의 핵심 아이디어는 경제적 교류 확대와 이를 통한 협력의 동력을 정치영역까지 확산(spill over)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남한과 북한이 먼저 경제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재정 및 화폐 통합을 이루어 내고, 이를 군사·정치·외교·통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 하지만, 역사적으로 국가 간 경제통합이 군사·외교 통합으로 이행된 경우는 드물다. 군사·외교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을 넘어서는 양국 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 (화폐 통합) 경제통합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한이 개별국가로 존재하지만, 양국 간 최적의 경제활동을 위해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합에 필요한 요소를 도입하는 등 경제통합을 구현하는 것이다.
 - 이 경우, 남한과 북한은 경제체제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상품과 노동 시장에서 장벽제거를 위해 조약 및 협약을 맺고, 단일통화로 화폐를 통합한다.
- (거주·이동의 자유) 경제교류의 급증에 따라 거주와 이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형 또는 투자형 이민의 제약도 낮아질 것이다.
- 경제통합국가 모형에서 남북한은 공동화폐, 재정의 부분적 통합 등 경제통합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지만, 군사·외교의 통합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 수 있다.

4. 군사·외교통합국가(중국-홍콩)

유미래씨의 하루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친구와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의 북쪽 판문각과 통일각을 거쳐 북한지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서 북한지역은 특별행정자치구로 선포됐다. 북한특별자치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지참하고, 90일 동안만 유효한 단기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숙박과 렌터카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다.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은 단일화폐로 통합되지 않아 해외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불했다. 북한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데 국제운전면허증은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서 굳이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북한의 전통시장인 장마당에 재밌고 독특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은 것 같다. 장마당에서 북한지역 특산품 등을 사기 위해 미리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해둬야 할 것 같다. 북한지역은 여전히 미달러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원화로 환전할까도 생각했지만, 다음 미국 여행 때 남은 달러를 쓰는 게 환전수수료를 아끼는 방법 같다.

평양여행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보니 북한특별자치구 청사 인근에서 하는 자치경찰의 기마행사 사진이 눈에 띈다. 제주 여행에서 봤던 제주 자치경찰 기마대와 복장이 좀 다르다. 흥미롭다.

북한지역 여행 시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기사도 꼼꼼히 읽어봤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교부 북한특별자치청 여권과 콜센터에 연락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외교부 북한특별자치청을 방문해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미리 여권 앞면을 복사해 두면 재발급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한다. 기사를 함께 여행 가는 친구에게 공유하고, 콜센터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뒀다. 여권 앞면도 폰카로 찍어두고 만약에 대비해 여권 사본도 챙겨둬야겠다.

□ 군사·외교통합국가는 남북한이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만 통합해 불완전한 통일을 하는 방식이다.

○ 군사·외교통합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중국과 홍콩의 통합으로, 이를 ‘일국양제’(一國兩制)형이라 한다.

-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에 관한 주권을 승계한 중국은 기존 홍콩정부의 기본법(the Basic Law)을 개정해 홍콩을 특별행정자치지구(the Hong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로 지정하고 홍콩 자치정부(자치정부 수반은 베이징에서 임명됨)에 국내문제(internal affairs)와 국제문제(external affairs)-경제협력 및 자유무역 체결과 국제기구 참여-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 하지만 국가 주권의 근간이 되는 군사와 외교는 중국으로 귀속시켜 홍콩의 핵심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중국과 홍콩의 관계는 일종의 군사·외교통합국가로 불릴 수 있다.
- 특이한 점은 홍콩의 경제체제는 중국식 국가주도형 사회주의와 구분되는 시장경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홍콩은 상이한 경제시스템을 운용하기 때문에 화폐통합과 재정통합은 부재하며, 홍콩은 홍콩달러(HKD)와 재정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 거주·이동의 자유도 제한적이다. 홍콩은 여전히 독자적 이민법과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 본토 주민(Mainland Chinese)과 달리 홍콩자치지역 여권(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assport)을 보유한다. 따라서 중국 본토 출신의 주민들은 홍콩에 머무르고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없으며, 홍콩 입경사무처의 통제를 받는다.

□ 남한과 북한이 중국-홍콩과 같이 일국양제형으로 통합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군사·외교는 통합되지만, 경제활동이나 거주·이전은 제약을 받는다.

- (행정부 통합) 남한 정부 주도로 북한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선포하고 특별행정구역에 국내 및 국제 문제(주로 경제협력)에 관한 자치권을 부여하지만, 북한지역 자치정부의 수반은 남한 정부에서 고위관료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 (군사·외교 통합) 남북한 전체의 군사 및 외교권을 남한 정부가 갖기 때문에 UN, OECD 등 국제기구 활동도 남한 정부가 대표로 참석한다. 군사 및 외교권 행사는 남한 정부를 중심으로 단일국가의 모습을 취하게 된다.
- (화폐 통합) 일국양제 하에서 화폐통합과 재정통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각자의 화폐와 재정자치를 유지한다.
- (거주·이동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국민들은 홍콩과 같이 특별행정구역 시민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남한 정부가 개별 지역의 국민들에게 각각의 여권을 발급한다. 거주·이전 시에 남한 국민은 남한 이민 관련 기관에, 북한지역 국민은 북한 이민 관련 기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5. 느슨한 연방국가(남북한 연방)

유미래씨의 하루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친구와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의 북쪽 판문각과 통일각을 거쳐 북한지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서 북한지역을 언제라도 자유롭게-여권이나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북한지역 거주자가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자유롭게 북한지역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직하기로 한 회사는 평양에 지사가 있는데, 내년 즈음 평양 근무를 신청하고 북한에서 생활해보는 건 어떨지 생각해봐야겠다. 생활물가가 남한보다 낮아서 2~3년 평양에 근무하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숙박과 렌터카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다.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은 아직 단일화폐로 통합되지 않아 해외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불했다. 현재 '남북한 화폐통합 5개년 계획' 수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남북한 화폐가 통합되어, 환전하지 않고 북한을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북한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데 국제운전면허증은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서 굳이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부산에서 유명한 ○○어묵이 북한에도 진출해서, 북한 장마당에서 어묵크로켓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평양여행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보니 북한특별자치구 청사 인근에서 하는 자치경찰의 기마행사 사진이 눈에 띈다. 제주 여행에서 봤던 제주 자치경찰 기마대와는 복장이 좀 다르다. 흥미롭다.

입사가 결정된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여유가 있어 여행 중에 평양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직 북한과의 행정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북한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은 어렵지만, 남한과 북한 거주자 모두 '민원 24'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평양에 도착하면 바로 처리해야겠다.

- 느슨한 연방국가로의 통일은 A국(남한)과 B국(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연방제 형태의 국가 C를 창설하는 방식이다. 느슨한 연방국가 유형의 통일은 역사적인 사례가 드물지만, 남한과 북한의 대등한 통일 시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 (행정부 통합 및 군사·외교 통합) 느슨한 연방국가 유형은 통일국가의 단일 헌법제정과 단일 의회구성을 미루거나 시도하지 않고, ‘남북한의 통일 정부’를 우선적으로 구성한다. 통일 정부가 군사·외교 분야를 담당하고, 남한과 북한 지역에 중앙의 통일 정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즉, 연방국가형태로 통일이 달성되었으나, 중앙의 통일 정부가 남한의 지방정부와 북한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형태이다. 남한과 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달성한 통일이므로, 통일 정부는 남한과 북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지방정부 각각이 실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는 형성되기 어렵다.
- (거주·이동의 자유)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자치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거주·이동의 자유는 불안정하게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거주이전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각 지방정부의 이민법에 따라 심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주·이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 (화폐 통합) 남한과 북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화폐는 이중적으로 사용된다. 즉, 유로화와 같은 단일화폐로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완전한 화폐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남한과 북한 지방정부 간 경제력 격차이다. 경제 관련 제도, GDP 수준, 산업구조, 재정 상태 등에서 남한과 북한 간 차이가 있으므로, 느슨한 연방제 정착 초기에는 각 지역의 화폐가 통용되고, 좀 더 시간이 흘러

북한 경제가 안정화되면 북한 화폐를 미국 달러에 연동(pegging)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 및 성장이 지속된다면, 대 달러환율에 대한 조정을 반복하며 평가절상(appreciation)이 시도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느슨한 연방국가에서의 화폐통합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6. 연방국가(통일 독일)

유미래씨의 하루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친구와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의 북쪽 판문각과 통일각을 거쳐 북한지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다. 내년 봄에 평양지사 발령이 예정되어 있어, 평양에 들러 집값, 이사비용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서 북한지역을 언제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몇 해 전에는 북한지역은 생활물가가 남한보다 낮아서 2~3년 평양에 근무하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고들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평양 집값은 수도권 수준이었다. 실제 생활여건도 서울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숙박과 렌터카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다. 은행에 들러 현금을 좀 더 인출할까 했지만, 수중에 있는 현금을 쓰고 부족하면 체크카드도 결제하면 될 것 같다.

북한의 전통시장인 장마당에는 독특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많다고 한다. 재밌는 건 부산에서 유명한 ○○어묵이 북한에도 진출해서, 북한 장마당에서 어묵크로켓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부산과 제주도에 있는 남한 기업의 아쿠아리움도 평양 대동강 인근에 신축되었다고 한다. 남한 도시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차라리 해외여행을 갈 걸 그랬나 싶기도 하다.

얼마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통신사에서 문자가 왔다. 가족할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내일 평양 숙소에도착해서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대동강 아쿠아리움 가는 길에 통신사 대리점에 들러 서류를 제출해야겠다.

- 연방국가는 국가 A와 B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제3의 새로운 국가 C가 탄생하는 형태이다. 통일 이전의 국가 A와 B의 국가체제는 사라지며, 새로운 국가 C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통치권과 행정권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킨다.
- 새로운 국가 C는 ‘흡수통일’을 통해서나 느슨한 연방국가의 중앙정부(남한 중심의 통일을 전제한다면 여기서의 중앙정부는 현재 남한정부)가 강화되면서 탄생한다.
- 일반적으로는 국가 A와 B 중 하나가 체제위기 혹은 체제붕괴를 경험함으로써, 정당성이 실추되고 중앙정부가 붕괴하면서 다른 국가에 흡수되는 방식이다.
- 대표적인 사례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다. 동유럽의 봄으로 대변되는 민주화 물결이 동독의 반공산주의 혁명으로 확대되면서, 동독 정부가 붕괴하였다. 서독 정부는 동독을 서독의 체제로 흡수·통합하여 독일을 강한 연방국가의 형태로 통일하였다. 1990년 5월 18일 동독과 서독은 경제, 통화, 사회의 통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여 7월 1일에 마무리하였다. 8월 23일 동독 의회는 10월 3일에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되는 방안에 동의했으며, 1990년 8월 31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조인하였다. 이후 동독의 다섯 개 주가 서독에 편입되면서, 독일의 통일이 달성되었다. 당시 통일의 방법으로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동독이 그대로 수용하는 안과 동독과 서독이 연방을 구성하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안이 논의되었는데, 동독이 전자를 선택함으로써 서독 주도의 흡수통일이 완성되었다.
- 연방국가 형태로 통일을 이룬 독일은 군사·외교 권한을 통일 국가가 구성한 단일한 중앙정부에 귀속시켜 독일 연방 총리가 행사하게 되었다. 경제 분야는 사민주의 경제로 통합되어, 화폐가 서독의 마르크로

통폐합되었다. 즉, 동독의 화폐를 폐지하고, 동독의 화폐를 서독의 마르크로 통합하였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어, 통일 이후에는 독일 내 어느 곳이든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이동 및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 연방국가의 형태로 남북한이 통일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한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나 느슨한 연방국가로 통일된 후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경우를 전제한다. 연방국가의 형태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군사·외교 통합, 이동 및 거주 자유 보장, 화폐통합, 행정부 통합이 모두 달성된다.

○ (군사·외교 통합 및 행정부 통합) 새로운 연방국가는 헌법을 제정하고,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새롭게 구성된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와 외교 권한은 통합되어, 연방국가의 국가원수 혹은 행정수반(대통령 혹은 총리)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 남북한이 연방국가 형태로 통일을 달성할 경우 북한지역이 권역별로 광역시 및 도 수준으로 재편되어 남한에 흡수되는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거주·이동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도 완전하게 보장된다. 즉, 통일한국의 국민은 영토 내 어느 곳이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주거의 자유 또한 보장된다.

○ (화폐 통합) 중앙정부의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통합을 이끌게 된다. 국가재정은 재정부가 총괄하며, 화폐통합 및 이자율은 통일한국의 중앙은행(현행 한국은행)이 총괄한다. 중앙은행이 단일통화를 만들어내고, 통화의 유통으로 발생하는 이자율의 변동을 관리한다.

MEMO

MEMO

참 여 연 구 진 |

유재광 부연구위원

정영훈 연구위원

이채정 부연구위원

강지희 연구원

송지은 연구원

